

농업방어론의 기획과 제안

— 제주도 농업의 생존 전략 구상을 위하여 —

金 錫 俊*

目 次

- I. 연구문제와 범위
- II. 농업문제에 대한 기존의 두 관점과 농업방어론의 의의
- III. 농업방어론의 접근 틀: 농업행위구조의 개념
- IV. 제주도 농업의 생존을 위한 기획과 제안
- V. 결 론

I. 연구문제와 범위

세계는 지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유도하고 강요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특정적으로 미국과 EC제국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 해소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영속화를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이 그런 경향을 상징화한다. 그리고 그런 추세의 구체화는 어떤 입장에서든 그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가사회의 다양한 적응양식의 모색과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여기서 예외일 리가 없다. 한국사회는 무엇보다 1960년대 이후 수출위주의 대외의존적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터라 이미 그와 같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깊숙히 편입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그에 규정받는 사회 성격을 굳힌지 오래이거나 그 체제의 위계서열상에서 부여받고 있는 일정한 위치 또한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과 조건 아래에서는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표어가 당연히 요구될 수 있는 현단계 한국 사회의 대안일 수도 있다.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전사회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국제화와 개방화를 당연한 적응양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그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이는 다른 분야보다도 우리의 농업현실과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그에 가해진 우루과이 라운드의 위협을 볼 때 매우 분명해진다. 그동안 우리의 농업은 다른 산업부문의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축소·위축되었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취약산업으로 또는 심지어 국제적 경쟁력이 없는 버려져야 할 산업으로까지 낙인찍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태가 이렇다 해서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농업의 포기란 식량생산능력의 포기를 의미하며, 이런 경우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은 전적으로 다른 농업국가의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농업은 그것이 영위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해주는 능력이 있다. 그 뿐인가. 앞으로 농업의 급속한 위축과 농촌의 붕괴가 가속화될 때에 도시로 유입될 인구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떠올려 보라. 그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위기, 그리고 사회문화생태학적 변동의 진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농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농업은 방어되어야 할 산업이지 포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제인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우선 다음 장에서는 농업에 대한 종래의 견해들을 비교·검토·비판하면서 농업방어론의 뜻을 해명하고, 그 뒤를 이어 이 글이 내세우려는 농업방어론의 접근 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 접근 틀을 구성하는 작업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후에 농업방어론의 입장과 접근 틀을 통해 볼 때 제주도의 농업을 위한 생존전략의 구성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떤 기획과 전망이 요청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논의는,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다른 작물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감귤의 문제로 좁혀진다. 이는 이 글이 하나의 탐색적 논의라는 데서 스스로 그어놓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계 안에서나마 하나의 온전한 기획과 문제제기를 해보려는 연구자의 의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 글의 범위를 한정시킴은 물론이겠다.

이미 제주도의 감귤을 포함하여 우리가 처한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무수한 언술과 주장,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언술들의 일부는 상당한 설득력과 이론의 근거를 지녔이 인정되나 일부는 그 어떤 적합한 이념이나 기본 틀이 없이 단기적이고 황급히 조성됐다는 감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또 한가지 헛된 주장을 보태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은 그와 같은 각양·각색의 논의들이 이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개진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농업방어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접근 틀을 구성하고 거기에 터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이 글의 짜임새는 그런 필요와 더 많은 토론을 위해서 택해진 것임을 밝혀 둔다.

1) 1965년에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이 55.1%, 1천 5백 80만명이던 것이 1992년에 와서 13.1%, 5백70만명으로 감소한 사정이 농업위축의 대표적 예이며, 1993년 12월 현재 쌀 89kg 한 가마당 국내가격이 12만원인 반면 국제가격이 3만원 남짓하다는 사실 등이 농업을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낙인찍히도록 만들고 있다.

II. 농업문제에 대한 기존의 두 관점과 농업방어론의 의의

농업문제를 농업이라는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체이자 그런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의 문제와 그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와 상호연관시키며 총체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것이 농업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농업문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틀을 요구한다.

종래 농업에 대한 관점들은 문제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개방론 또는 비교우위론 대 보호론, 농외소득적 시각 대 농업소득론적 시각, 대규모 경영체제론 대 소농 경영체제론, 수출농업론 대 내수농업론 등으로 구분·대조될 수 있다(*cf.*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도입, 1991: 217-225). 그러나 맥락적으로는 이들이 개방론 또는 비교우위론을 한 편으로 하고 보호론을 또 다른 한 편으로 하여 서로 연결된 논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외소득론이나 대규모 경영체제론, 수출농업론은 개방론 또는 비교우위론과 어울리는 사례가 많고 나머지는 보호론과 그런 모습을 마찬가지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개방론 또는 비교우위론과 보호론으로 대별해서 검토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개방론자들은 국내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화가 단기·중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농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리라고 낙관한다. 이들은 무역의 자유화가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증대시키며 이것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이는 농업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믿는다. 문제는 개방에 의한 사회변동과정에서 농업의 행위주체인 농민의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론자들은 우리의 농업문제란 기본적으로 농민과 농촌정책에 치중하여 해결해야 하지 생산성이 낮은 농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결코 성공적일 수 없다고 본다. 농업문제에 대해 농촌 및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구별하고 농민을 풍요롭게 하며 농촌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산업자본을 농촌에 끌어들이 개발에 투입하는 것도 농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마다할 일은 아닌 것이다.

나아가 개방론자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단순히 식량자급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비효율적인 농업투자보다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투자로 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도 이미 낡은 수구적 개념으로 인식되며 농지제도도 더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히 그 뒤를 잇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방식을 전업화·상업화·기업화한 경영, 대규모의 기계화된 영농으로 전환시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민들은 과감히 이농 또는 탈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탈락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고령화로 인해 자연감소가 기대되는 부분을 제외한 농민들을 농공단지로 개발하여 유인하거나 다른 산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한다면 그 사회적 충격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론의 입장에 대해 보호론자들은 우선 우리의 농업이 그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농산물개방은 그것을 더 악화시킬 따름이며 이를 방지한다면 우리 농업의 재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농업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정책과 투자를 위한 계기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식량안보와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보조금의 확대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현재의 농업체제로부터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도시자본의 투입이라든지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농민과 농업을 말살하는 것이 되며 결국에는 식량자급 체제를 무너뜨려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게 되리라는 경고도 서슴치 않는 것이다.

농업경영방식에 있어서도 개방론자들의 대안에 대해 보호론자들은 그러한 경영방식이 한국의 토지형태와 성격, 농민의 생활방식과 결코 어울릴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그러한 방식보다는 가족농들의 협업화, 공동체적 경영과 소규모의 영농을 선호한다. 여기에는 지금보다 더 급속한 이농과 탈농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다른 산업의 노동력 수요를 초과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도시문제와 기존 산업노동자들의 소득저하가 초래되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중첩되어 있다. 게다가 농업은 생명산업이기에 더 이상 위축되거나 농지의 휴경화나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가속화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오게 되리라는 것도 보호론의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개방이 기정 사실화됨으로써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개방론이 이러한 보호론의 논리보다 우위에 서게 된 셈이다.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개방론자들의 주장과 예측처럼 규모의 영농, 기업화와 기계화, 도시 자본의 농촌개발과 다수 농민의 탈락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그 명맥을 이어가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도 이런 방향임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보호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까지 자연히 해소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지녀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부터 더 심각해질 것이고 이에 대한 방심은 예측불가능한 감내할 수 없는 사태를 결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 글에서의 농업방어론은 다름아닌 바로 이러한 관심과 염려에서 입론의 한 근거를 찾게 된다.

우리의 농업방어론은 일단 보호론자들의 문제제기를 수용·계승하는 입장에 선다. 그럼에도 보호가 아닌 방이라는 용어로 보호론과 일정하게 차별화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은

보호라는 용어가 지닌 사전적 뜻이 농민을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존재로 대상화함을 함축하지만 방어는 보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할 대상으로서 농업을 지시할 뿐더러 그 과정에서 농민의 주체적 지위와 행위를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물론 그동안도 농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왔고 현재의 상황이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농민의 자주적 적극적 대응이 이전보다도 더 요구되는 상황에 다름아닌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는 싫든 좋든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대명제를 우리의 농업에도 부과하고 있다. 보호론자들의 내수농업지향적인 농업관을 이런 상황에서까지 집착하기에는 주변의 변화가 너무 큰 것이다. 그렇다고 개방론자들의 규모의 영농만이 대안일 수는 없다. 그것이 물고을 충격도 충격이려니와 우리 농업이 지닌 생태학적·사회문화적 조건은 규모화를 겨냥한 단일방향의 농업개편을 일정한 제약하기에 그렇다. 때문에 우리의 농업은 가족농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방식이 혼재하면서도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보다 적응적이고 충격의 효과를 완화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충분하다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농업방어론은 이런 관점에서 보호론자들의 그것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며 이것이 또 한 가지 그와 차별화하는 이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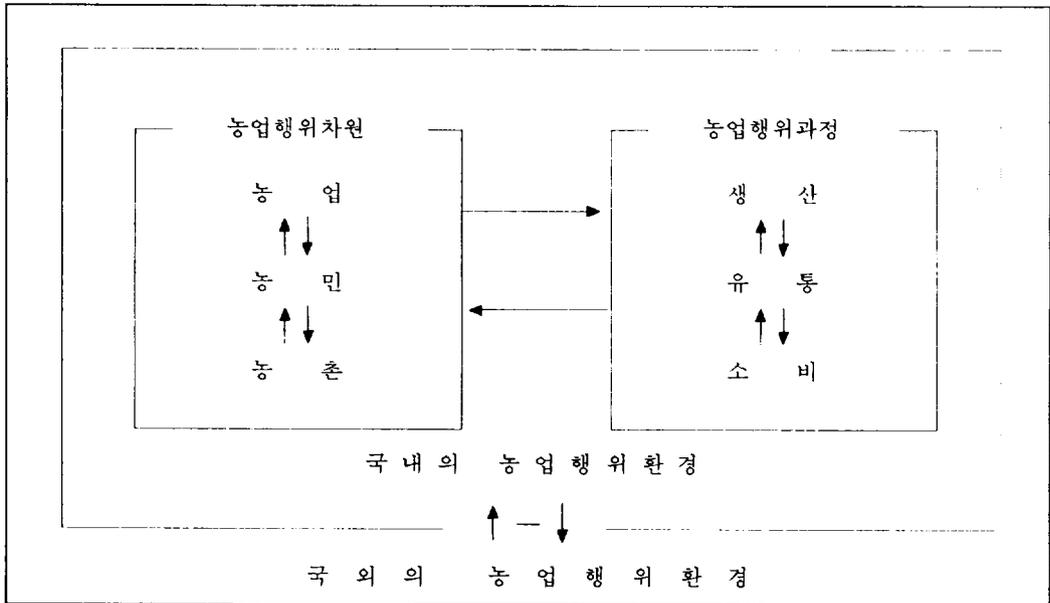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결국 농업방어론은 국제화와 개방화를 전제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방론에 대한 보호론의 문제제기를 수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응력있는 농업론의 구성을 겨냥해야 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는 국제적 보편화의 논리(개방론)에 노출된 농업·농민·농촌문제에 대해 한국적 특수성의 논리(보호론)를 재생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보고 그로부터 대안을 구하자는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Ⅲ. 농업방어론의 접근 틀 : 농업행위구조의 개념

우리의 농업이 지닌 생산성이 저열하고 이미 농산물 개방이 거의 확정된 마당에 농업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때늦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지만 도리어 이러한 상황과 조건이기에 더욱 더 농업방어론의 의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에서 농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그런 활동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생력과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농업방어론의 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접근 틀을 먼저 구성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자면 이보다 선결할 것이 없는 탓이다. 그러자면 첫째로, 현재의 당면문제는 물론 미래의 닥쳐올 문제까지 적실히 포착하는 문제중심적인 접근 틀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효율적 방어를 위해서라면 접근 틀의 실용적 측면과 색출적(heuristic)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제적 환경변화를 담아내고 농업내부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전망과 대안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동태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틀이 요구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글에서는 농업방어론의 접근 틀로서 농업행위구조의 개념을 탐색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른 무엇보다 행위구조의 개념이 갖는 매우 포괄적인 쓰임새가 이 개념을 채택하도록 만든다. 미시적인 단위행위에서부터 중범위와 거시적인 조직적 또는 제도적 수준에서도 적용가능한 것이 행위구조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실용성에 기대어 여기서는 농업 행위구조를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행위과정에서 결합된 인적·제도적·물적 요소의 총화로 정의한다. 이 행위구조의 개념도식을 간략히 윤곽잡은 것이 <그림>이다.



<그림> 농업행위구조의 개념도식

그림에서 보듯이 농업행위구조는 분석적으로 두 개의 범주와 두 가지의 행위환경으로 나누어진 다. 두 범주 중 농업행위차원이란 농업(행위 곧 경제적·기술적 차원), 농민(행위주체 곧 정치사회문화적 차원), 농촌(행위의 장 곧 생태학적·인문지리적 차원)이라는 세 차원을 구성요소로 하면서 그것들

이 상호 연관된 총체성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구체적 농업행위과정의 단계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또 다른 범주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저장과 가공행위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장행위는 유통행위과정의 한 구성부분으로, 가공행위는 위 행위과정의 일차 주기가 종료되는 소비행위의 단계에 상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와 국외의 농업행위환경은 이 두 범주간의 관계와 각 범주를 구성하는 내부요소간의 관계에 상호규정적으로 작용하는 국내와 국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생태학적 환경으로서 매우 폭 넓은 상황적 조건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행위환경을 열거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 환경 중 일부만을 특화시켜서 접근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요청 곧 가변적 적용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전체로서 농업행위구조는 이상의 것들의 상호연관 속에 구조화되고 재구조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미리 지적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농업행위를 생산·유통·소비의 행위과정의 단계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의 개념도식에서는 양자를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이 오해와 다소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양자를 동일시할 경우 그 행위의 주체인 농민의 문제와 행위가 일어나는 장이면서 삶의 터전인 농촌의 문제가 사상될 개연성을 회피하고자 함이다. 말하자면 지나친 경제제일주의적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절차와 무관하지 않게 된다. 첫째, 농업문제를 적어도 분석적으로는 농민·농촌문제와 분리가능한 경제적·기술적 측면으로 한정시켜 하나의 행위차원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 인 농업행위의 과정으로 별도로 개념화하여 양자의 관련과 문제를 일단 밝힌다. 둘째, 그런 논의와의 관련을 염두에 두면서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에서 농민들의 행위는 주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와의 연관에서 농촌은 어떻게 변모되어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정리 하여 농민·농촌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접근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이는 농업행위가 실제로 생산·유통·소비라는 행위과정과 분리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우리의 접근 틀에서도 그런 행위과정의 순환과 경제적·기술적 차원으로서 여전히 조우함을 뜻한다. 나아가 우리의 개념도식에서는 위와 같이 함으로써 농민·농촌문제도 그러한 행위과정에 동시적으로 조우함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점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업·농민·농촌문제에 대한 접근은 그러한 농업행위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의 상호연관성을 문제 중심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도 좋은 것이다. 이러한 것이 보다 정리된 사고와 해결방안을 마련해주는 한 방안이 되길 기대하면서 예시적으로 부분간에 분리·결부될 수 있는 문제를 색출하고 그 연관성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먼저 농업행위차원의 범주에서 농업의 문제는 경제적·기술적 측면인 만큼 합리성과 능률,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행위를 선택·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주어진 또는 변화가능한 환경하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장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어떻게 선택·재배·가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곧 행위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면서 생산·유통·소비의 행위과정에서 합리성과 능률을 추구하는 문제인 것이다.

농민의 문제는 정치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검토된다. 이 문제는 농민들의 조직화와 정보획득의 문제 그리고 농민들의 그러한 활동을 받쳐줄 일상생활 양식 곧 문화와 후생복지의 문제로 구분지을 수 있다. 조직화는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환경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조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작물의 선택과 재배면적 등과 관련한 생산의 자율적 조절과 생산기술의 공유·유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와의 직거래 통로 등의 집단적 개혁, 정치적 활동을 통해 농민에게 유리한 정책 곧 환경변화를 유인하는 것 등이 그런 조직화의 목적들이다. 이런 때에 농민문화는 보다 자주적으로 형성되며 역동적일 수 있고, 이것이 일상생활양식의 중요부분으로서 농민간의 사회적 유대의 강화도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행위과정과 행위환경에 대한 정보획득은 그런 조직화와 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개별 농민단위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수행·공유돼야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정보체제의 구축과 정보의 축적도 조직적 노력으로 훨씬 수월할 것이다. 후생복지는 그러한 조직적 활동기술과 정보획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의 문제, 그리고 의료와 농어민 연금문제 등의 정책적 노력과 불가분의 것으로 이 또한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농민들의 보다 풍족한 일상생활 양식, 곧 농민문화의 형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이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태학적·인문지리적 차원인 농촌문제는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생계유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생산·유통·소비의 행위과정을 원활히 순환시킬 수 있게끔 하는 생태학적 조건과 변화의 문제로 대별된다. 전자가 정주의 문제이고 역동적인 농민문화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설비공급의 문제라면 후자는 생산행위의 편리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토지의 구획정리, 농로 등의 개설과 포장, 그리고 저장·가공을 위한 시설의 배치, 소비자와의 유통경로를 시간적으로 단축하고 저비용으로 가능케 설비와 수단을 마련하는 문제이다. 나아가서 도시의 농산물 소비자들을 직접 농촌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설비의 개선, 그리고 이벤트의 창안과 실행도 여기에 결들일 수 있다. 이는 노동간의 교류를 촉진시킴과 아울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목적도 지닌다.

이상은 농업행위차원의 범주를 기준으로 농업행위과정의 범주를 연관시키면서 일차적으로 떠올려

지는 문제를 색출해 본 것이다. 국내와 국외의 농업행위환경은 앞서 매우 폭 넓게 정의해 보았다. 그러나 국내의 행위환경에서 직접적인 관심은 크게 소비자들의 음식문화, 정부의 농업관련 정책과 각종 법제도 등에 모아질 수 있다. 국외의 행위환경은 해외의 농업행위구조를 지칭하는데 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는 해외의 농산물생산 및 수출입동향과 교역조건 등이 관심거리이다.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해외 소비자들의 음식문화와 국제사회의 전반적 변동방향에 대한 미래예측적 대비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농업방어론의 접근 틀을 활용하여 제주도 농업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IV. 제주도 농업의 생존을 위한 기획과 제안

1. 제주도 농업의 상태 : 감귤의 경우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이후의 논의는 감귤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행해진다. 이는 제주도 농업에서 다른 작물들의 비중도 적지 않지만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감귤이고 수입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민들 역시 감귤재배자들인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양파나 마늘, 감자, 콩, 보리같은 다른 작물재배자들에게 가해질 문제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농업행위구조의 틀을 수용하여 특정 농업의 생태를 제대로 거론하자면 그 농업의 역사적 전개과정, 경제적·기술적 측면과 산업으로서의 지위,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조직, 사회문화적 특성, 농촌지역의 자연 및 생태학적 특징과 인문지리적 조건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와 국외의 환경적 요인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러한 행위구조의 형성과정과 현단계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전망도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우 선별적으로 논의를 간추릴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감귤재배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도내의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주도의 생태학적 조건에 착안한 1965년부터의 1차 감귤주산지조성 5개년 계획의 수립, 그 후의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과 감귤유통처리 3개년 계획 등 일련의 정책지원으로 점차 재배능가가 늘어난다. 1961년 총재배면적의 0.3%에 불과하던 감귤 재배면적은 1982년에 21.6%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동안 감귤생산량은 전체농업생산량의 0.3%에서 47.9%로 급증한다. 그러다가 지난 83년 이후 감귤이 과잉생산되면서는 그에 대한 자구책으로 파인애플이나 바나나하우스시설이 들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이 대체작물들은 수입개방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추고 최근에는 주로 감귤의 시설농업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 이 시설감귤의 경우 남제주군 지역에서만 지난 1989년에 7.3ha, 34농가에 지나지 않다가 1993년 5월 현재

536농가 169.5ha로 늘어났고, 북제주군 지역에서도 같은 시기에 0.3ha에서 22.6ha로 확대됐다. 지금에 와서 감귤농업은 1991년 기준으로 전체농업소득의 절반을 넘는 67%, 4,251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는데 이는 도민총생산액 2조882억원의 무려 20%나 되는 규모이다. 감귤재배면적도 21,727ha에 이르며 여기에 종사하는 가구수도 도내 전체농가 4만50여가구의 67%인 26,571가구나 된다.

이렇듯 감귤은 종래 발농사위주의 생계농업이었던 제주도의 농업경영방식을 상업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추세를 확장시켜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를 축적시켜 주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농촌사회의 생활환경과 농민의 일상생활양식의 근대화가 촉진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감귤은 그와 관련된 사회조직의 창출(대표적으로 감협), 관광산업을 위주로 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도로망의 확충, 생산·유통·소비의 농업행위과정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 등 제주도 전체사회에 대한 중요한 변동요인의 역할도 해왔다. 말 그대로 제주도의 상징으로 그 지위를 굳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러한 감귤의 지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다른 농산물도 같은 운명이지만 1997년 7월부터 감귤생과의 전면개방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감귤의 지위와 직접 관련된 오렌지농축액과 신선 오렌지도 시기와 양만 다소 다를 뿐 전면개방된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수입개방으로 인한 감귤농가의 피해만도 무려 7천9백30억원이나 된다는 예측이 있지만 그 위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수입으로 인한 감귤가격 하락이 1992년 15kg당 7천원이던 것이 2001년에 5천4백원으로 하락한다는 예상에 대해서도 그렇다.

산술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감귤농가의 피해액 7천9백30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같은 기간 동안에 입을 7조7천8백억원이라는 피해총액의 약 10%나 된다. 그런데 제주도내 농가수는 전국(약 164만가구)의 2.4%에 불과하고 이중 67%만이 감귤농가이다. 이는 전국농가수의 1.5% 남짓인 것이다. 다른 지역의 농가에 비해 감귤농가의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엄청난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감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상황 곧 새로운 농업행위환경에 처하게 됐다. 우리의 접근 틀에서 행위차원과 행위과정의 범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미처 준비도 못한 채로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됐다는 평가가 정확할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우리의 감귤농업을 제대로 방어하자면 그 두 범주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는 필수적이다. 국내 농업행위환경에 있어서 정부는 국제화와 개방화만을 외치고 있지는 않으리라 희망하면서 감귤농업의 생존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지 그에 대한 기획과 제안을 해보도록 한다.

2. 생존전략 구상을 위한 기획과 제안

이미 감귤산업을 위한 여러가지 훌륭한 기획과 제안들이 많이 나와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러한 제안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했던 부분 또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한다. 물론 앞에서 제시한 우리의 접근 틀과 농업방어론의 입장에 터한 논의여야 한다.

먼저 그 틀에서 농업행위환경에 대한 점검부터 하자. 현재 국내와 국외 행위환경의 변화추세는 국제화, 개방화라는 표어가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이는 이제 생존경쟁의 범위와 대상이 일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범역으로 실질적인 확장이 이루어짐을 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존경쟁-거의 무한정의 경쟁-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오히려 철저한 지방화와 지역화가 아닌가 한다. 지방과 지역의 고유함, 다양성이 튼튼히 견지됨으로써만 그런 경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만이 지닌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더 가꾸고 지켜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감귤에 있어서도 이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 감귤이 외국산에 비해 당도가 떨어지고 산도가 높다면 그 자체가 우리 감귤의 특성일 수 있다. 그런 감귤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국내나 국외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공략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른바 고품질로 평가되는 고당도 저산도의 감귤개발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감귤의 개발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 보다 상품 다양화의 전략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요청된다.

우리의 감귤재배방식은 규모화되었다기보다 소규모의 가족농 위주라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약점이 아니라 나름대로 장점이 될 수 있다. 대량생산과 낮은 생산비를 위해서는 대규모화, 기계화 영농으로 가야하겠지만 이는 불변자본에 대한 투자를 높이게 만들어 이윤률 저하를 결과할 우려가 크고, 우리의 토지형태와 성격은 그런 대규모화와 기계화에 적지 않은 제약이 된다. 요즘은 소규모영농에서 한층 적합성이 높은 농법이 소개되어 있거니와 대표적인 것으로 유기농법에 의한 저공해농산물 생산방식을 들 수 있다. 물론 과수에 대해서는 유기농법의 개발이 아직 미진하고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농법은 우리 감귤의 미래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그것은 그런 농법에 의한 농산물에 대해 국내외의 사회적 요구가 장차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욱 더 악화되어가는 인문자연환경의 문제가 저공해농산물의 욕구를 키워나갈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 또한 농업행위환경의 변화상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 전개될 그린라운드에 대한 사전대비의 의미도 지닌다. 이미 미국이나 EC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농업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왕에 수입됐던 농산물들의 농약 잔류성분으로 인해 야기된 말썽을 상기해보라. 수입과정이란 대개 장시간의 저장을 필요로 하고 그 기간중에도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의 농약과

약제를 쳐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수입농산물, 수입 감귤과 우리 감귤간의 차별화는 유기농법이나 저공해농산물로 도모함이 적절한 것이다. 흔히 단점으로 지적되듯이 이 생산방식이 가격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할 리없다. 지금은 그런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 벌써 일상화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에 대한 소비는 기대 이상의 확장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유기농법화했을 때 오는 이점은 이른바 '저투입 지속적 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 LISA)'의 목적에도 부합하여 벌써부터 산성화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토질을 개선하고 생산력의 계속적 확보를 보장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획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기호를 포함한 음식문화를 조사·분석하는 작업을 국내와 국외에 걸쳐 수행해야 한다. 그 변화를 예측해야 함은 물론이겠고, 이런 작업은 농민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해내어야 하며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농업행위환경의 변화하는 모습 중에 또 하나가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이라면 우리의 정보획득은 소비자 기호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종합적인 농업정보체제의 구축이 그런 맥락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국내감귤생산이 제주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역농업정보체제의 구축은 매우 추천할 만하다. 이 체제에서는 감귤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국내와 국외의 모든 정보가 수록·처리·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농업관련중앙기관에 있는 거시적 농업정책을 위한 몇몇 정보체제나 정보항목이 아니고, 농협 등의 여수신관리를 위한 온라인체제가 아닌 지역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항목을 갖추어 농민과 관련전문기관들을 연결시킨 종합적 정보망이 그것이다. 정보통신사업체나 공공기관들의 도움이 있게 되면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정보망은 또한 유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쓸모가 있다. 감귤을 수요로 하는 시장이나 소비자 집단들과 전산망을 통해 직접 접촉하고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직거래임을 잘 안다면 이런 정보체제의 유용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망과 함께 지역단위의 농민조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보다 자율적·자주적으로 자신들의 농업과 일상생활을 유지·변화시켜 나갈 그런 조직으로서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는 이농과 탈농의 바람막이 구실도 해내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초적으로는 마을단위로, 그리고는 읍면단위로, 군단위로 점차 조직을 계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중 중요한 조직 수준은 물론 마을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마을단위의 작목별 생산과 가공, 저장,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을단위의 조직은 그런 뜻에서 수평적 조직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작목별 협동조합과 작목반의 수직적 계열화가 아니라 주민간의 수평적 조직체로서 작목별생산조정위원회 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이는 마을단위에서의 자율적 생산과 가공, 저장, 유통의 업무분담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농업행위의 조절과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행위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치적 활동까지 마을단위에서부터 가능한 조직으로의 전환을 함축한다. 구태어 그런 조직화의 모델을 든다면 스테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형식의 생산자협동조합에서 그 원형의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직체에 의한 마을단위의 가공문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산물가공이라면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있는 공장에서 적어도 자동화한 기계설비를 갖추고 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마을단위나 생산협동단체단위로 결합된 소규모의 설비와 노동력으로도 충분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생산비나 품목에 있지 않고 일정한 규모나 자본금을 강요하는 농산물가공과 관련된 각종의 법률체제와 대량생산의 산업주의에 물든 우리의 의식, 그리고 그런 가공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관련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결여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을단위에서 가공된 물품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나 몇몇 특산물 공판장에서나 겨우 팔 수 있는 것도 그런 장애와 무관치 않다. 마을단위 조직에서도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제의 정비와 그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품질검사, 인증제도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 다양한 상표의 다양한 감귤가공품을 한 번 생각해보라. 이는 지방화와 지역화의 또 한가지 기획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설픈 농공단지조성에 수천억씩 투자하는 것보다 1차산업과 2차산업을 연계해 농가의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데 한결 효과적일 것이다. 농공단지의 폐해를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고 싶지는 않다.

농업행위환경의 주요 구성부분인 농업관련법체제는 이러한 가공문제에서만 봐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인용하자면 우리의 “주세법은 포도농가가 포도나무를 찍어내는 것은 놔두고 생산농민들이 직접 포도주를 제조하는 것만 금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도정관계법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모터를 사서 마을단위로 몇 사람이 도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식품제조위생법이라는 것도 농민들이 조그마한 가공산업을 하려해도 어렵게 되어있다. 도대체 농민들이 농사 이외에 할 것도 마땅치 않고 하려는 것도 모두 안되게 되어 있다(김성훈, 1991: 17)”,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법률이나 시행령들이 농업의 발전이 아닌 그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산재해 있다. 경쟁력있는 농업행위구조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하도록 개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지원은 재정지출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며 심지어 적절한 재정지출조차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주어진 농업행위환경에 따른 농업행위과정들을 농민들이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게 긴요한 것이 또 있다. 정보체제의 구축과 보급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쉽게 수용하길 기대하는 것은 너무 소박하다. 이런 양상은 우리보다 고도화된 정보체제속에서 산다는 일본농민의 경우라고 특별하지 않다. 교육이 늘상 그래왔던 것마냥 관주도의 정부시책 홍보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그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교육, 그것은 현장감이 있는 교육일 것이다. 여러 교육기관이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욱 더 강화하여 고도의 전문적 농민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설비는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농업학교나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특수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단기적이어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축성있게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런 부분을 지나쳐선 안될 것이다.

우리의 틀에서 농업행위차원의 농촌문제도 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결해야 하겠다. 정주체제의 문제도 그렇다. 그 지역의 고유함과 다양성을 상실한 농촌정주체제는 의미가 없다. 지역의 고유함과 다양성을 복돋우며 그것을 기초로 그 위에 농업행위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주체제여야 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말해 갓쓰고 양복입은 모양새가 아닌 컴퓨터를 다루는 작업복의 젊은 농민이 있는 그런 농촌상을 그린다. 그 안에서의 생활양식 자체가 문화이고 그 문화가 하나의 이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대한 도시인의 향수와 접근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가 이런 데서 구해질 수 있거니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가까이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데 힘을 모으게 하는 계기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포장이 안된 비좁은 농로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보면 오해이다. 생산, 저장, 유통, 가공 등의 농업행위과정을 원활히 순환할 수 있는 도로망이나 통신망은 오히려 그럴 때에 동시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제안의 상당 부분은 아직 문제제기의 수준의 추상적 기획에 맴돌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안들 곧 문제제기가 보다 충실히 해당될 수 있고 그 효과가 예측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기획과 제안은 하나의 완결된 연구결과라기보다 앞으로의 연구계획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할 수 있다. 이 연구계획의 수행은 물론 학제적(interdisciplinary study)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접근 틀인 농업행위구조의 개념이 그렇듯 요구되는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의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다.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감금이 내년부터 부분개방되고 1997년부터 전면개방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서둘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다 냉정히 그리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제안 중 하나는 그런 학제적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지는 것이 된다.

연구팀은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의 조직을 하나로 묶는 유기적 성격의 것으로 구성됨이 보다 적응적이라고 생각한다. 한 부분은 비교적 항구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장기적인 연구기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연구과정을 평가 심의하는 일종의 연구위원회 같은 산·학·관의 결합 조직이고

다른 한 부분은 그런 장기적 기획에 따라 때로는 단기간의 한시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으로 때로는 비교적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를 띠도록 한다. 이는 일종의 전문가들의 과업집단(task force)의 형태가 된다. 이러한 과업집단의 구성과 그에 맞는 연구과제의 선정 등은 전자의 위원회조직에서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위원회는 여러 전문분야별 전문가들의 분포나 그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정보 그리고 농업관련 연구들에 대한 축적된 정보들을 저장·관리해야 할 것이다. 과업집단은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에 효율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게끔 유연한 조직일 것은 물론이다.

V. 결 론

이 글의 내용도 그렇지만 단일 품목으로는 여러모로 비중이 큰 감귤의 수입개방 문제에 가려서 다른 제주도의 작물과 재배농민에 대한 제안이나 정책적 배려가 충분치 않다. 제주도 농업사에서 의 위치나 그런 작물들의 경제적·산업적 비중이 감귤에 못지 않다는 데서 이에 대한 문제도 활발히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한참 이 글을 마무리지을 즈음 우리의 접근 틀에서 국내 농업행위환경의 큰 부분인 정부의 농업정책이 한가지 발표됐다. 지난 1월 17일 농수산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그것이다. 내용은 염려하던 대로 앞에서 검토했던 개방론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보호론의 경고에 대한 거의 전적인 무관심이라 할 만했다. 극히 일부분은 우리의 농업방어론의 기획과 제안에 상응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에 반하는 방향인 것이다. 과연 보호론의 경고에 적절한 대응정책이 없어도 좋은 것인지. 이런 의문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성훈, 1991, "6공화국 농업정책의 기초와 전망,"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편 「한국농업의 위기와 재편방향」 창작과 비평사, 11-19.

한국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편, 1991, 「한국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 비봉출판사.